

‘광주경찰 숙원’ 동부서 이전 사업 속도 낸다

용산동 토지 소유주와 소송전 일단락... 2027년 개청 ‘청신호’ 첨단3지구에 중부서 신설도... 495억 투입 2028년 문 열기로

광주경찰의 숙원인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른다. 중부경찰서 신청사 건립에도 속도가 붙어 각각 2027~2028년 동부서와 중부서가 문을 열 전망이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동부서 이전 예정지 토지 소유주가 광주시 동구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부지에 경찰서가 들어서도록 허가한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동부서 이전 사업에는 총 사업비 372억원이 투입되며, 청사는 용산동 산11번지 일대 2만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6000여㎡ 규모

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은 지난 2007년부터 대의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청사가 노후화됐으며 청사 이전 예정 부지를 몰색했으며, 지난 2017년 용산동을 이전부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신축 부지에 자신의 토지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토지 매매 협상을 거부하고, 동구청의 행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축 이전은 동구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측면이라기보다 동부경찰서 구성원들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해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

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982년 건축된 동부경찰서는 건물 노후화로 막대한 수선유지비가 예상되고, 청사 부지가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다”며 “경찰서를 (새로) 설치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10월 18일에서 대법원이 토지소유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유지하면서 소송전은 일단락됐다.

광주동부경찰청은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동구청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토지소유자와 보상 여부를 협의하고, 결렬 시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송전이 이어지는 사이 자재값 등이 급증한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 150억원 가량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주경찰은 오는 2024년까지 신설 동부서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착공, 2027년에 준

공 및 개청할 계획이다.

중부서 신설 사업도 속도가 붙었다. 광주경찰은 총 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해 북구 오룡동 첨단 3지구 개발예정지에 부지면적 1만 3223㎡, 연면적 1만 5173㎡ 규모로 중부서를 세울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계약금 10억원을 들여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6월에 중도금 30억원도 지급했다.

광주경찰은 내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마친 뒤, 2025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6년 중부서를 착공할 방침이다. 준공 및 개청은 오는 2028년으로 잡혔다.

중부서는 북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 치안을 담당하며, 주거 단지가 밀집한 북구 양산-연제-건국-신용-본촌 일대와 광산구 월계-쌍암-비아동 일대를 관할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후 8시~오전 8시 스쿨존 ‘시속 50km’

광주시 5곳 ‘가변형’ 확대 적용

광주시가 밤 시간대에 한해 속도 제한을 시속 50km로 늘리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광주시 5개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 적용한다.

광주시는 이달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광주시 6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주간(오전 8시~오후 8시)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운영하고,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에는 시속 50km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6월 남구 송원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도 시스템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예산 2억 4000여만원을 추가 투입해 광주시 서구 만호초, 남구 삼육유치원, 광산구 정암초-하남초-송정서초 등 5개 지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전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유지해 왔던 어린이 보호구역이자 왕복 6차로 이상 대로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시간에 따라 다른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LED 표지판이 세워지며, 도로에는 ‘시간제 속도 제한’ 문구가 표기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단속 기준이 시간별로 달라진다.

각종 시설 설치 공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이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내년 2~3월께 준공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 폭이 넓고 차가 많이 지나가는 곳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광주시의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적용해 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빛 1호기 퇴장 선포식

원불교 탈핵 순례 11주기 기념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대책위)가 27일 탈핵 순례 11주기를 맞아 영광에서 ‘한빛 1호기 퇴장선포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영광군청에서 영광터미널까지 행진하며 ‘수명 다한 한빛1호 퇴장’을 촉구했다. 이어 한빛원전으로 이동해 575차 순례기도와 함께 한빛 1호기 퇴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2012년부터 중대사고 없이 한빛원전 1호기가 안전하게 설계수명에 맞춰 폐쇄되기를 염원하며 매주 월요일마다 영광 지역에서 ‘생명평화탈핵순례’를 해왔다.

이들은 “한수원이 최근 한빛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자체 의견도 묵살하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가 27일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수명 다한 한빛1호 퇴장'을 촉구하며 한빛1호기 퇴장임을 전달하고 있다. <원불교 대책위 제공>

목포 찜질방서 빈대 발견...다중시설 첫 확인

수면실서 10여마리...업주 자체 방역·전문업체 통해 방역 계속

전남지역 찜질방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 광주·전남지역 단독주택과 숙소에서 빈대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다중이용 시설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목포시는 27일 오후 1시께 “목포시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이용객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역반이 긴급 출동해 찜질방 수면실을 조사

한 결과 빈대 10여 마리를 발견했다. 한 마리가 살아있었고 나머지는 사체 상태로 확인됐다.

빈대는 수면실 바닥의 나무 합판으로 된 장판 틈새에 서식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찜질방 업주는 자체적으로 스팀 소독기를 이용해 1차 방역 작업을 했고, 이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방역 작업을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시는 인근 업소들을 비롯해 다른 찜질방에도 빈대가 확산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찜질방 외 다른 곳에서 빈대가 추가 발견되거나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에서 빈대 발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4일에는 광주시 서구 삼촌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지난 20일에는 진도군 의신면의 어가 주택과 외국인 숙소 등지에서 빈대가 발견됐다.

부당대우 참는 청소년들 “학생 노동인권 필요”

광주 10명 중 7명 대응법 몰라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해결방법을 몰라 서 참고 일하거나 대응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광주지역 청소년 4297명과 중·고등학교 교원 536명, 중·고 등학생의 학부모 1245명을 총 6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주 청소년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40.9%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지 못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34.4%에 달했다. 또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경우는 2020년 49.8%에서 2023년 64.0%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당대우를 겪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전체 78.1%에 달했다. 해결방법을 알지만 계속 참고 일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5.3%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를 그만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9.4%였다. 해결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4%에 달했다.

한편 28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실에서 ‘2023년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글 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달이 되련다>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